

전략연구 2020-24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역량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 직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윤기석 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9
제1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의 및 특징	9
제2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직업역량	13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13
2. 문화적응 전략	15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직업역량	17
4. 청소년의 직업훈련	20
제3절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제도 및 법률	23
제3장 충남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 및 실태	27
제1절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27
1. 다문화가정의 자녀 현황	27
2.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현황	29
제2절 충남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	34
1. 충남 다문화가족 및 자녀 현황	34
2.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충남 다문화 청소년 및 관련 정책 현황	36
제3절 충남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37
1. 충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7
2. 충남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인터뷰 결과 내용	40

제4장 해외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사례	27
제1절 프랑스 이민자 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사례	43
1. 이민자 인구 현황 및 특징	43
2. 프랑스 이민정책의 변화	49
3. 이민자 가정 청소년의 교육 및 진로지원 정책	52
4. 시사점	55
제2절 독일 이민자 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사례	56
1. 이민자 인구 현황	56
2.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 현황	59
3.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지원 정책	62
4. 시사점	6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67
제1절 연구결과	67
제2절 정책제언	70
참고문헌	73

표 목차

〈표 1〉 다문화 청소년 관련법과 대상	23
〈표 2〉 청소년 수련시설의 다문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30
〈표 3〉 청소년 수련시설의 다문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수	30
〈표 4〉 다문화 청소년 관련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 유형	31
〈표 5〉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사업 세부 프로그램별 운영방식	33
〈표 6〉 충청남도 거주 외국인 주민 인구 현황	34
〈표 7〉 2018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구성	35
〈표 8〉 충청남도 15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19년 1월 기준)	37
〈표 9〉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서면 인터뷰 질문 내용	40
〈표 10〉 학위에 따른 실업률	47
〈표 11〉 생활수준 비교	49
〈표 12〉 2019년 독일 유형별 이주자 배경	57
〈표 13〉 2019년 독일 연방주별 이주자 배경	58
〈표 14〉 2019년 독일 20세 미만 이주자 배경	59
〈표 15〉 2017년 독일 이주자 배경 여부에 따른 교육 수준	61
〈표 16〉 2017년 독일 이주자 배경 실업률	61
〈표 17〉 이주자를 위한 국가 통합계획(NIP, 2007)	62
〈표 18〉 청소년 통합 교육과정 구조	64

그림 목차

[그림 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08~2018)	2
[그림 2] 학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07~2018)	10
[그림 3] 1999년 이후 영국 청소년 고용정책 전달체계	21
[그림 4] 2018년 다문화 가구 자녀 연령분포	27
[그림 5] 2018년 다문화 가구 자녀 학교별 취학	28
[그림 6]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운영체계	31
[그림 7]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사업(多재다능프로그램) 운영체계	32
[그림 8] 2009~2018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자녀 수 변화	35
[그림 9] 프랑스 이주민 출신 국가	43
[그림 10] 프랑스 이주민 출입국 현황	44
[그림 11] 프랑스 이주민 증감 현황	45
[그림 12] 프랑스 이주민 학력	46
[그림 13] 1998~2004 졸업 이후 3년간 이주자 자녀 활동 상태	47
[그림 14] 1995~2010 사이 이민자와 비이민자 실업률 변화	48
[그림 15] 프랑스 직업교육 과정과 체계	54
[그림 16] 독일 공교육 시스템(초등-중등교육)	6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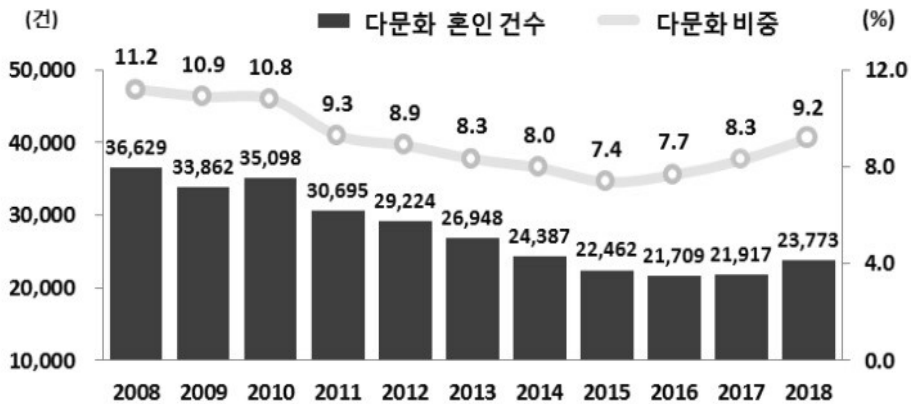
한국 사회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제 노동력 이동의 흐름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 급속히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외국 국적 소지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¹⁾ 수는 2009년 110만 명이 넘어선 이래로 2018년 2백만 명이 넘어서면서 9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였다.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생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월에 조사된 통계청 인구주택 결과를 보면 충청남도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4.8%로 전국 1위이고, 인원수로는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7.1%로 매우 낮다. 2018년 다문화 출생아는 18,079명으로 전년(18,440명)보다 361명(-2.0%)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8년 전체 출생이 32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8.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2.0%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적었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전년보다 0.3% 증가했다. 충남의 경우 다문화 출생 비중이

1)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 외국인 주민 자녀를 말함.

2008년 5.4%, 2017년 5.9%, 2018년 6.4%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5.5%보다 높은 비중이다.

[그림 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08~2018)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많다. 국제결혼을 위해 이주해 온 배우자도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갖는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들은 서로 인종적으로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의 문화적 갈등을 겪기 마련이므로 그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 갖게 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적응 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언어가 부족하고 학업성적이 떨어지며, 주변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학교 내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등의 사회적 고정관념의 결핍과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강현주, 김정화 외, 2012). 또한 정부 지원정책의 시각에서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책 또는 서비스는 대부분 다문화가족을 특별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설명한다(김혜정, 유진이, 2009).

이처럼 많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연구에서 ‘학습결손’, ‘학교 부적응’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혼혈 청소년들은 차별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이유 중 ‘그냥 다니기 싫어서’가 46.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 때문에’가 23.4%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 원인을 보면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가 63.6%로 가장 많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53.5%)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학업 수행과 교우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을 보면 보통 이상이 약 90%를 차지하고, 학업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한 응답이 10.4%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습역량과 관련성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중 13세 이상 자녀만을 대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일반 청소년이 갖고 있는 고민을 비교해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중 고민이 없다는 응답이 21.9%로 청소년 일반의 6.4%보다 3배 이상 많다. 13세 이상 다문화가정 자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관련한 것이며(48.2%), 그 다음으로는 공부(성적, 적성 등) 39.4%, 외모(17.3%), 용돈부족(14.3%), 친구(우정)(1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고민은 학업 이후에 진로가 가장 크며, 이는 한국의 일반 청소년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한편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문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 사회에서 진로를 위해서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적성을 탐색하고 진학과 취업 등의 진로를 준비하는 등 진로관리능력 함양이 중요하다. 청소년기가 진로개발 역량을 갖춰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의 교육방향은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지도에 머물고 있어 이들이 상급학교에 성공적으로 진학을 하더라도 진로에 미결정과 발달과업에 대한 미성숙의 문제는 남아있게 된다(류재윤, 이유경, 2012).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진학이나 진로상담에 대한 정보제공의 어려움이 있다. 진로교육은 진로교육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정보의 획득과 일회성 진로결정에 그치지 않으며, 학생의 행동과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지향하며, 진로개발의 다양한 상황에 전이 가능한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관심과 갖고 지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때문에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 연구의 대부분은 학교생활 적응, 학력부진, 가족 간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이들이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인생설계를 위한 연구가 거의 없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 중 15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경험 유무를 질문한 결과 7.8%로 매우 낮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졸업, 중퇴 등)에 직업기술훈련은 17.5%로 비교적 높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가 원하는 직업훈련 요구는 5점 만점에 평균 3.21점으로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직업과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대학입시 이외에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역량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는 거의 부재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개발지원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학교 내에서 이러한 진로지도가 되지 않는다면 다문화지원센터나 청소년센터에서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역량 및 관련 지침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을 제고하고 있다(임언 외, 2008). 이는 일반 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혹은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사회 적응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이고 당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부족하다. 게다가 이에 대한 책임을 다문화가정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문화가정 중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어서 각 가정에서 해결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개선해야 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최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지원정책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갖추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데에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 직업교육 정책의 문제점의 원인을 밝히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 데에 이 보고서의 주된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분석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첫째,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 및 지원정책
-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진로정책 분석
- 셋째, 프랑스와 독일 이민자 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및 직업교육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 내용적 범위 :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 관련 이론적 배경,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응과 역량강화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 등을 조사한다. 또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한다.
- 첫째 문헌자료 조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즉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과 문제점,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논문과 전문 도서, 각종 통계자료 등) 자료를 기초로 실태조사를 한다.
-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충청남도 가족정책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려 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의 방향,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정책 방안 모색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담당자

- 전문가 인터뷰 주요 질의 내용 -

1) 충남 다문화가정 관련 일반 질문

- 충남 다문화가정 수의 변화. 장기 정착률은?
- 충남 다문화가정의 경제 상황
-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해서 충남도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조사를 한 것이 있나요? 있으면 결과는 어떤가요? 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결과는 어떤가요?
- 충남도의 다문화 관련 기관들이 얼마나 되나요?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화적응에 대해서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가 크다.

2-1) 충남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일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2-1) 충남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

2-1) 현재 언어와 학습 관련 지원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사회 진출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

3)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같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재하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과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한국사회를 접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적응을 어렵게 한다.

3-1)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2)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끌어내는 프로그램은 없나?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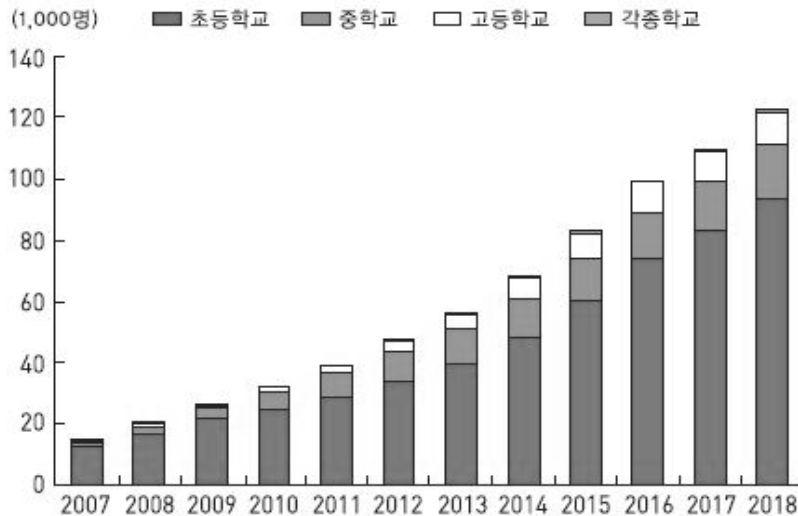
다문화란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에 따라 각 사회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의미하며, 국제결혼 가정을 보편적으로 다문화가정으로 부르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가정의 형태로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은 성장 환경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언어와 생활, 교육, 사고방식, 관습 및 문화를 갖고 서로 공존하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연성, 최유, 2006).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국제결혼가정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김정원,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세 가지 유형의 청소년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인과 결혼한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중도입국자의 자녀 및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그 대상이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공식 통계가 집계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국내 출생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뿐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가정 자녀 등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청소년의 범위는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광의의 범위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기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양계민, 강경균, 2017). 그러나 이들 집단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에 따라 그 범위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림 2] 학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07~2018)



- 주: 1) 다문화가정 학생 수=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중도입국 자녀)+외국인가정 자녀.
 2)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3)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4)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호스트 사회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민 혹은 이주민의 자녀들이 호스트 사회에 점진적으로 동화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그들이 겪는 경험은 부모 세대와 다르며 타의에 의한 문화적응의 스트레스는 부모에 비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금명자 외, 2006).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가정 내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로

나누어 한국 사회 적응 실태를 조사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에서의 취약점, 지원현황, 향후과제에 대한 연구(김정원, 2006)와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심리사회적 적응정도를 분석하는 아동복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

국제결혼가족 자녀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금명자 외, 2006),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비교한 연구(조영달, 2006) 등이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외국인 부모의 정체성 혼란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자녀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업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많다(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아 학습도구 구입 및 사교육 등에 투자할 비용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으므로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구인회, 2003).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의 위험이 높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는 각각 다른 나라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우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돈 때문에 부적응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충청남도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준비를 위한 장기적인 준비를 위한 연구로 2010년 ‘충남 다문화공감 행복충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김영주 외, 2010)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주민 자녀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정책으로 교육지원과 인재육성 관련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초기 적응에 대한 부분과 이중 언어에 대한 역량 강화 및 활용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자녀 생활실태 및 정책 지원방안’(우복남, 2011)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가족, 학교, 친구, 여가활동 등 비교적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 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원이 영유아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청소년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문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문화적응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도 대부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적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한

했다는 점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역량 강화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

한편 최근에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로 수행한 ‘충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우복남, 2019), ‘충남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의 효과 증진 방안’(우복남, 2019) 등에서는 충남 지역사회에서의 상호문화 존중을 다루고 있다. 충남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의 효과 증진 방안 연구의 경우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남에서 하락했던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충남에서 문화다양성 증진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이뤄져야 할 정책 목표인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민 배경 자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2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직업역량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절반 이상이 발달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청소년기로 진입하게 되면서, 청소년기의 특성상 겪는 정체성 혼란에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청소년기는 성장과정에 있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Erikson, 1968)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내에서 다른 가치와 신념, 행동, 관습 등을 경험하는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Padilla, 2006; Sue et al., 2007).

두 문화의 영향을 모두 받으면서 동시에 습득해야 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응은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과정(Lynch, 1992)이다. 다른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서 이들은 태도, 가치관, 정체성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Berry의 문화적응 이론(acculturation theory)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Powell(1880, 1883)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문화 간 모방(cross-cultural imitation)으로 유발된 심리적 변화를 설명한다. 그 후 Redfield, Linton과 Herskovitas(1936)는 문화적응을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이 지속적으로 접촉할 때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고유문화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Redfield 등(1936)의 정의로 문화적응을 이해해보자면, 문화적응은 접촉(contact), 상호 영향(reciprocal influence), 변화(change)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Sam & Berry, 2006).

우선 접촉은 문화적응이 발생하는 전제조건이다. 두 번째로 문화적응은 상호 간에 영향을 준다. 문화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군사적 힘의 차이는 문화적응이 발생하는 동안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문화적응은 변화를 가져온다. 여기서 변화는 변화되고 있는 과정(process)과 변화로 인한 결과(outcome)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적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과와 과정 모두를 살펴봐야 한다.

Redfield 등(1936)의 정의에 기초하여 초기에는 문화적응을 동화와 동격으로 바라보는 제한적인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후에는 동화가 문화적응의 유일한 유형이 아닌 여러 유형 중의 하나임을 제시하며, 문화적응을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Sam, 2006). 전자는 문화적응이 결국 동화로 향한다는 일방향(unidirectional) 모델이며, 후자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강조하는 양방향(bidirectional) 모델이다(Berry, 1997; Liebkind, 2006). 일방향 모델은 부정적인 결핍의 대상으로 문화 간 이동자를 보고, 그들은 결국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는 방향으로 흡수된다고 보았다(Liebkind, 2006). 이 모델의 관점에 따르면, 주류문화와 고유문화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고유문화 정체성은 잃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두 문화를 유지한다면, 심리적인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Sam & Berry, 2006).

반면 양방향 모델은 접촉하는 개인들 또는 집단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지만, 그 변화는 일방향적이지 않다고 본다(Sam & Berry, 2006). 결국 이 관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은 주류사회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고유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취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의 대표적인 이론은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이다. Berry에 따르면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신념, 관습, 행동, 정체성의 변화 등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인 변화과정을 말한다(Berry, 2003; Berry et al., 2006; William & Berry, 1991). 문화적응 과정 속에서 개인은 두 문화의 수용 정도를 결정한다. Berry(2009)는 이를 문화적응 전략(acculturation strategies)이라고 일컫는데, 그는 문화적응 전략을 집단과 개인이 문화적응을 위해 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문화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문제로 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다.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과 달리 한국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한 외국에서 성장하여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 모국문화 정체성과 한국에서 어떤 집단에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 김기현 등(2013)의 연구에서는 초기적응 프로그램들이 언어지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조혜영(2012)은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편견의 시각과 비하의

말로 상처를 받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갖기에 어려움을 가진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다문화 어울림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과 자녀 양육환경 지원 및 다문화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에 노력을 하고 있다. 다문화 어울림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충남도는 ‘충남 다문화가정의 아동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실태 파악과 교육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주노동자 부모나 결혼이주민 부모를 따라 뒤늦게 한국에 들어온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교실인 충남비전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는 충남비전스쿨을 통해서 중도입국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존감을 향상시킴으로서 한국사회의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도 기존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나 외국인 결혼 배우자의 한국문화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충청남도과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청소년진흥원이 함께 주관하는 다문화청소년 멘토링 '多함께 이쁨이와 오름이' 프로젝트는 당진시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외국어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비다문화 청소년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문화적응 전략

문화적응 전략이란 집단과 개인이 문화적응을 위해 택한 여러 가지 방식을 말한다 (Berry, 2009). 이런 문화적응은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동화가 문화적응의

유일한 형태가 아님을 강조한 Redfield 등(1936)의 주장을 배경으로 Berry(1970; Sommerlad & Berry, 1970)는 동화와 통합을 구분하고, 분리와 주변화를 추가하여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는 개인과 집단의 문화적응 전략을 제시한다.

Berry는 여러 심리적인 요소들(문화적 정체성, 언어, 사회적 행동, 동기 등)을 포함시켜 문화전략 논의를 확장시켰으며, 문화적응이 일방의 변화가 아닌 쌍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 따라 기존의 문화적응 전략에 주류 집단 변화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새로운 문화인 주류사회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와 자신의 고유 유산과 전통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문화적응 전략이 구분된다. 국내 고유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모두 높을 경우 통합형(integration)으로, 이는 두 문화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이다.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전략은 동화형(assimilation),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 수용을 거부하는 전략은 분리형(separation), 두 문화 모두에 접촉하지 않는 경우를 주변화형(marginalization)으로 구분한다. 국내연구의 경우 통합형은 선호되는 전략이 아니다. 이현주와 강현아(2011)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3학년부터 6학년 다문화 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전략을 조사한 결과, 동화형과 분리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통합형과 주변화형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한편 외국인 부모(어머니)의 출신 국별로 조사한 결과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 분리형이 많이 나타났으며,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어머니를 둔 경우 동화 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을 밝히며,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문화수용과 정체감 형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혜지(2009)는 서울과 대전에 거주하는 346명의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전략을 분석한 결과, 주변화형, 통합형, 분리형, 동화형 순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동남아시아 국적, 연령, 거주기간, 교육 년 수, 유배우자, 자녀의 수가 이들의 문화적응 전략을 유의미하게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동화형을 취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거주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다문화 자녀들에게서 동화형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현주와 강현아(201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충남도는 2019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에서 ‘이민배경자녀 역량 강화’ 정책으로 ‘학습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등을 위해 학습지도(독서, 한국역사이해 등), 정서지원(심리치료, 아동상담 등), 사회성발달(또래문화적응, 리더쉽교육 등), 체험활동(문화·예술, 봉사활동 등)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원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역량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 또는 충남지역에서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2019년 7월에 있었던 ‘다문화정책 워크숍’(충남연구원, 2019)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지원 중심의 논의가 주를 이뤘다.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중요하지만 향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교육과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직업역량

청소년의 진로 발달은 사회계층적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회계층적 요인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사회적 자아의 실현과 심리적 자아의 실현으로 이뤄지는데, 흥미나 가치와 같은 심리적 변인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한편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실적 지식의 양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생기고 확산·전달되면서 지식을 기억할 필요는 줄어들었지만 대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고 적용하는 적절한 도구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이나 지식을 단순히 수용하거나 기억하기보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력이나 기존의 지식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종합능력과 분석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읽고 쓰고 말하는 기초능력만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competency)’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김기현 외, 2009).

역량의 개념은 개인의 특성 중 행동으로 드러나는 수행의 측면만을 부각시키는지 아니면 개인의 동기나 특질·자아개념 등을 포함한 내적 측면을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한편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우수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동기(motive), 특질(traits), 자기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등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정의한다(권일남, 2009). 최근 역량은 직무에 있어 중요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 역할이나 책임 등에 영향을 주는 지식·기술·태도와 관련된 일종의 군으로, 기준에 의해 측정 가능하고 훈련이나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윤초희, 2008).

청년고용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최근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해소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위의 고용노동부 진단처럼 경기 상황과 노동시장이 구조적 문제 등 거시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만 직업교육훈련과 같은 미시경제적 대책의 영향도 받는다. 이에 최근 선진국들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실업 대책 방안의 효력이 크지 않자 미시경제적 대책을 통해 청년 노동력을 숙련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혜원외, 2015에서 재인용).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진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의지나 진로포부는 높을지라도 학교 진학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 게다가 다문화가정 형편상 저임금 단순노동으로 인하여 학업에 방해를 받는 등 다문화가정 청소년 개인의 입장에서의 의지와 포부를 달성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진로와 관련하여 한국의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 낮은 직업포부수준을 가지고 있다(임경희, 2013).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장벽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양계민 등, 2016), 직업탐색과 진로 계획에 대한 진로발달 정도가 낮은 특징을 가진다(남부현, 최충옥, 2012).

또한 다문화 학생의 진로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 스트레스와 친구 스트레스가 이들의 진로에 관련이 있고,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의사소통, 부모 지지 등이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다(김민정,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진로에

대한 관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유경, 류재운, 방홍복, 2012).

한편 국내에서 진로상담프로그램, 진로교육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갖는 이중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진로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진로 관련해서 일반 한국의 학생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는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까지 고려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방해가 되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²⁾

결론적으로 진로교육이나 취업교육을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³⁾과 이후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중요하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2)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화적응과 진로에 대한 연구에서 질적연구방법으로 진행이 된 것은 많지 않음. 특히 진로와 관련해서 질적연구는 거의 없음. 이에 본 연구는 연구설계 당시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그리고 진로와 관련해서 질적연구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4. 청소년의 직업훈련

현대사회의 노동시장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서 일찍부터 청년층 실업률 문제로 힘들었던 선진국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대상의 범위가 크면 욕구에 맞추기 어렵고 참여율과 효과성이 저하된다(O'Higgins, 2001³⁾). 최근에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강화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실업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고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자격제도와 연계해서 교육과 훈련 이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IMF경제 위기 이후인 1990년 후반부터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소년기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청소년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을 빠르게 도입하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하지만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겨우 8%에 불과하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정보 부족(34.5%), 필요성을 못 느껴서(33.6%)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직업훈련에 대한 의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30%로 경험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관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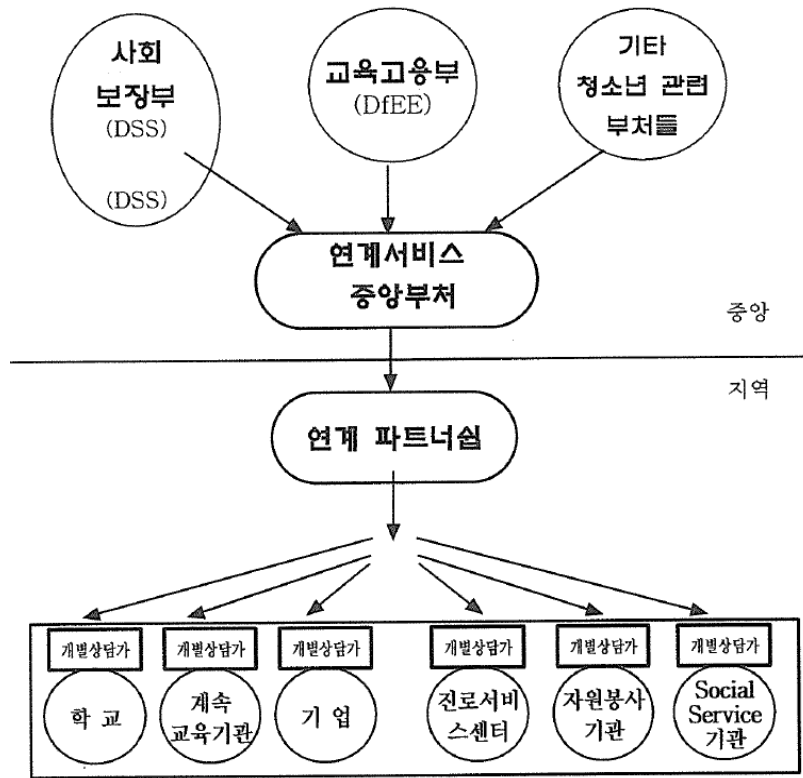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청소년은 노동시장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입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이 더없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Maclagan, 1997⁵⁾).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함께 진로상담, 직업 관련 정보제공, 구직 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3) Niall O'Higgins. 2001.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A global perspective, ILO.

4) 2018년, 2019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직업훈련 부분을 찾지 못함. 이에 2017년 자료를 활용.

5) Ianthe Maclagan, 1997, Out of Credit: Report on the Impact of Youth, Youthaid, London.

[그림 3] 1999년 이후 영국 청소년 고용정책 전달체계



출처: 정영순, 유원선, 2003, 한국과 영국의 청소년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pp. 71-96.

특히 가정이나 건강에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직업훈련에도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함께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는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을 받기 이전부터 직업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직업훈련은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연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가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고용은 교육, 고용, 사회복지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때 효과가 크다(Werner, 1999)⁶⁾. 영국은 이를 위한 청소년 고용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행정체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6) Heinz Werner, 1999, Countries With Successful Employment Policy : What Is Behind Their Success?, Labour Market Research Topics. No. 33,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한편 한국은 모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직업 훈련은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과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조규필, 김수진, 2019, 박은하, 2018, 김진원 외, 2017)⁷⁾. 대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 시행)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충남에는 운영 기관이 부재한 상태이다. 동천안직업전문학교에서 ‘내일이룸학교’ 프로그램으로 미용사(일반)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한부모,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청소년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필요하다. 한편 더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대학 진학보다는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7) 조규필, 김수진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훈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6(1), 131-154 ; 박은하 (2018). 취약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 현황과 자립지원정책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5(10), 299-319 ; 김진원 외,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직업훈련에 관한 참여 실행연구: 조선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8(2), pp. 63-99.

제3절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제도 및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기(9-24세)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대상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이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나 북한이탈주민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현실적인 수요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박본순, 강기정 외, 2013). 이런 맥락에서「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청소년복지지원법」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들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포함하고 있다.

〈표 1〉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과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기 자녀
청소년복지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 이외에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자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아동 보육·교육,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다(법 제5조-제12조).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지원법 체계에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시책이 노력 규정 또는 프로그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법적 성격보다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별법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시책, 즉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이 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된다.

한편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을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또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등 거주지 안에 있는 여러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동 또는 학생들을 대부분 포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 사업’이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으로는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 양육 지원의 강화, 가족 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건강가정교육,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가정봉사원 지원, 가정

생활 문화의 발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건강가정사업 전달체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제35조).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복지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시행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3장 충남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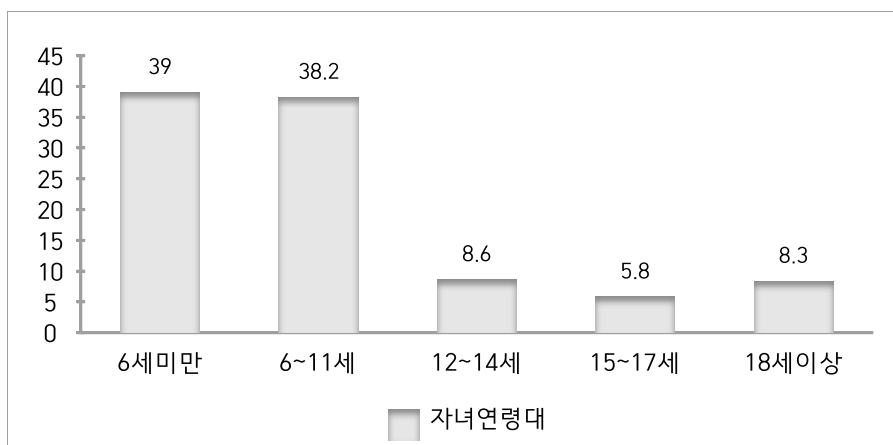
제1절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1. 다문화가정의 자녀 현황

2018년 기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평균 연령은 8.32세이며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의 비율이 가장 높은 39.0%를 나타냈다. 그 뒤를 이어 초등학교학령기에 해당하는 6~11세의 자녀가 38.2%, 12~14세 중학교 학령기 자녀의 비율이 8.6%, 고등학교 학령기의 15~17세 자녀 비율은 5.8%로 가장 낮았으며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의 비율은 8.3%를 보였다(〈그림 3〉).

이로써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11세까지의 연령 비율이 77.2%로서 전체 자녀의 연령대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5년 이내에 12세 이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령기 자녀의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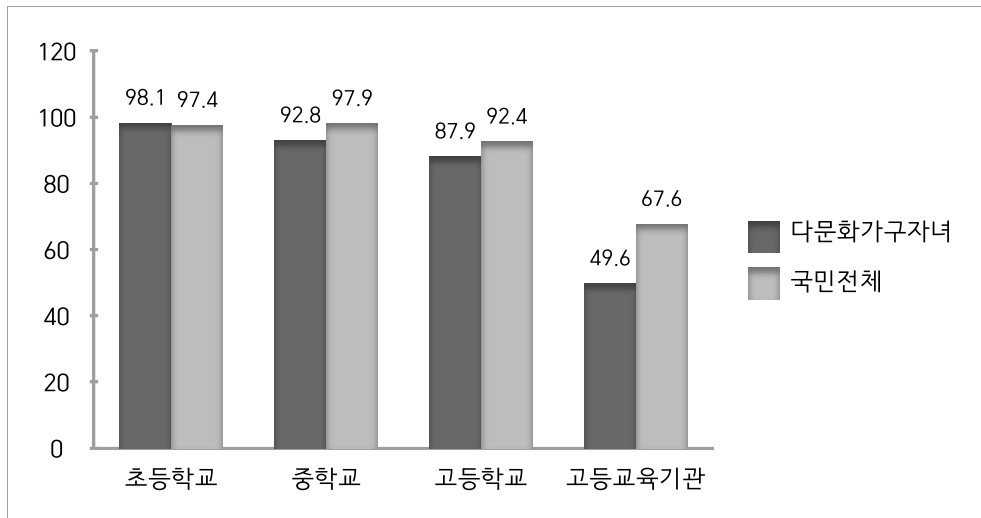
[그림 4] 2018년 다문화가구 자녀 연령분포



출처: 여성가족부(201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9.3.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국민 전체와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취학률에서는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중학교 진학부터는 격차를 더 보이면서 중학교 취학률이 92.8%로 국민 전체 취학률보다 5.1% 낮게 나타났다(〈그림 3〉 참고). 고등학교에서는 4.5%의 차이를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등) 취학률은 18.0%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47-49).

[그림 5] 2018년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급별 취학



출처: 여성가족부(201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9.3. 재인용: 2018년 국민 전체 취학률,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자료재구성

앞서 살펴본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18세 이상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업률에 대한 통계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의 취업 현황에 대한 자료는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15)에서 찾을 수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2015)”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부모와 본인의 이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집단들’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중도입국자녀를 초점으로 하여 국제결혼 재혼가정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를 한정하여 조사했다. 여기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5)에 따른 통계를

보면 24세까지 중도입국청소년 168,000여 명 중 후기청소년(만 15세~24세 이하)이 약 12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취업과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취업률은 대안 직업학교인 서울다솜학교, 한국폴리텍 다솜학교에서 전공 관련 업체로 약 50%를 보였고, 진로탐색 및 진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무지개청소년센터와 위탁기관들에서는 20%의 취업률을 보였다. 또한, 한국에서 직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주배경청소년이 72.8%로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26.2%) 보다 월등히 높았다(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5:59).

2.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진로정책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多재다능사업)’, ‘내일이룸학교(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 대상)’⁸⁾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지도자 지도하에 수련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및 설비,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 조직적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전국에 79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185개소)’, ‘청소년문화의집(248개소)’ 등 두 가지 유형의 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37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은 이들 청소년수련시설 중 46개소 청소년수련관과 60개소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총 106개소의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내용은 <표 2>, <표 3>와 같다. 다문화

8)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내일 이룸학교에 대한 내용은 제외함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은 46개소 중 9개소(19.6%), 청소년 문화의집은 60개소 중 8개소(13.3%)이며 청소년수련시설 106개소 중에서 운영시설 수는 17개로 16.0%로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운영비율을 보인다(〈표 2〉 참고).

〈표 2〉 청소년수련시설의 다문화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여부

(단위: 개소, %)

시설종류	운영함		운영하지 않음		전체	
청소년수련관	9	19.6	37	80.4	46	100
청소년문화의집	8	13.3	52	86.7	60	100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자료재구성

다문화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수는 9개소 청소년수련관의 전체 프로그램 45.1개 중 3.1개(약 6.9%)에 불과하며 8개소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14.6개 프로그램 중 5.0개로 약 30% 정도를 차지했다.

〈표 3〉 청소년수련시설의 다문화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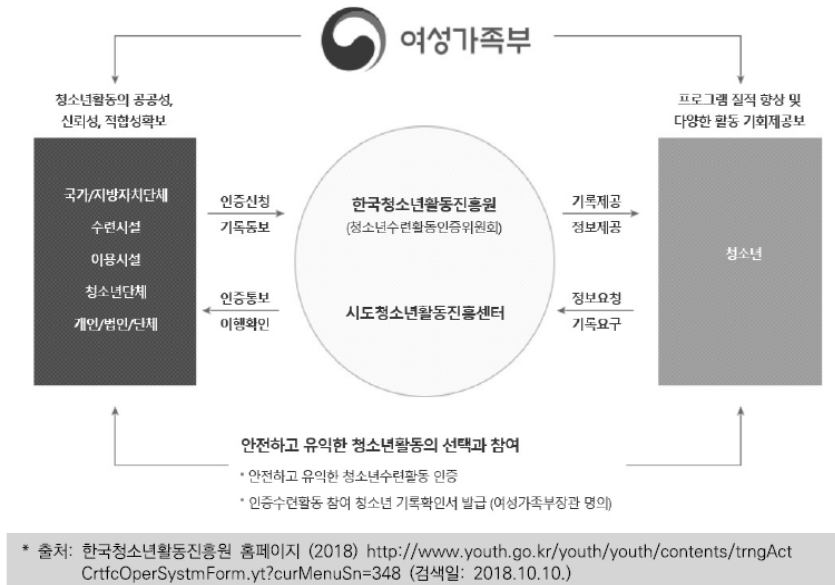
(단위: 개)

시설 종류	참여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9개소)	3.1	45.1
청소년문화의집(8개소)	5.0	14.6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자료재구성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있는데 청소년활동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인증제도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해 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379). 이 제도의 운영체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운영체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2007년에 시작되었고 2018년 6월까지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총 7,800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380)이다. 이 가운데 다문화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은 <표 4>와 같다. 전체 인증프로그램 중에 다문화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며 유형별로 교류 활동(18개), 문화 예술 활동(13개) 프로그램이 가장 많으며 그 뒤로 자기(인성) 계발 활동(5개), 봉사 활동(3개), 모험 개척 활동(2개), 직업 체험 활동 및 환경 보존 활동이 각각 1개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 차원에서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은 그 수를 더 보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4> 다문화청소년 관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유형별 구성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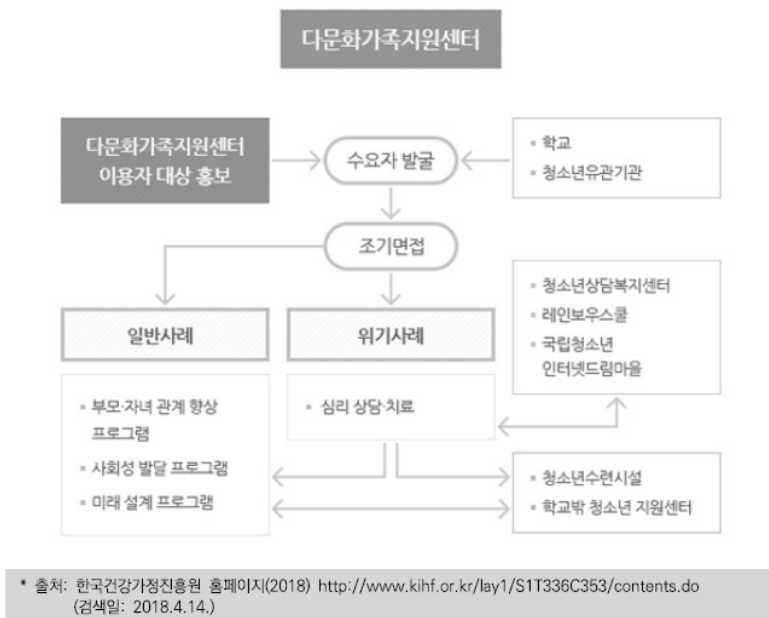
구분	다문화청소년관련프로그램		전체 인증프로그램	
건강보건활동	-	-	581	7.4
과학정보활동	-	-	458	5.9
교류활동	18	41.9	112	1.4
모험개척활동	2	4.7	1,253	16.0

구분	다문화청소년관련프로그램		전체 인증프로그램	
문화예술활동	13	30.2	853	10.9
봉사활동	3	7.0	401	5.1
자기(인성)계발활동	5	11.6	2,468	31.6
직업체험활동	1	2.3	1,033	13.2
환경보존활동	1	2.3	589	7.5
기타	-	-	74	0.9
합계	43	100	7,822	100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多재다능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와 중도 입국청소년 등을 위해 정체성,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기준 전국 152개의 건강 가족·다문화가정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152개 기관 중에서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74개이며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68개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383-386). 이 사업의 운영체계는 <그림 7>와 같다.

[그림 7]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사업(多재다능프로그램) 운영체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으로 상담심리치료, 부모자녀관계향상프로그램,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미래설계프로그램과 같은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수와 그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미래설계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프로그램은 60% 이상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미래설계프로그램은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비율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다.

<표 5>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별 운영방식

(단위: 개소, %)

구분	자체운영		외부기관(전문가) 연계 운영		전체	
상담심리치료(상담)	36	64.3	20	35.7	56	100
부모자녀관계향상프로그램(교육)	41	62.1	25	37.9	66	100
사회성발달프로그램(역할강화)	42	62.7	25	37.3	67	100
미래설계프로그램(진로코칭)	30	44.8	37	55.2	67	100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교육부에서 다문화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매년 발표하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서 수립된다. 그 주요사업(2018)은 ‘글로벌브릿지사업’, ‘진로상담교사 연수’, ‘다문화연구학교’,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403-404).

- 글로벌브릿지사업 : 다문화학생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교육프로그램 제공(20개 사업단), 권역별 글로벌브릿지 사업단(대학)에서 수학·과학, 언어, 글로벌리더십, 예체능 등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연 80시간 이상).
- 진로상담교사 연수 : 진로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상담의 실제에 대한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 다문화연구학교 : 연구학교를 지정 및 운영(15교, 2차년도)하여 다문화학생의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능력신장을 위한 진로교육 모델을 개발한다.
-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 직업 현장 체험, 진로 설계 등을 통해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16교).

제2절 충남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

1. 충남 다문화가족 및 자녀 현황

충남도청이 발표한 충남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은 2017년 11월 기준(행안부 및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총 104,854명으로 전체 도민(2,162,426명)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국내 출생 외국인 주민 자녀는 12,628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2.1%를 차지한다(〈표 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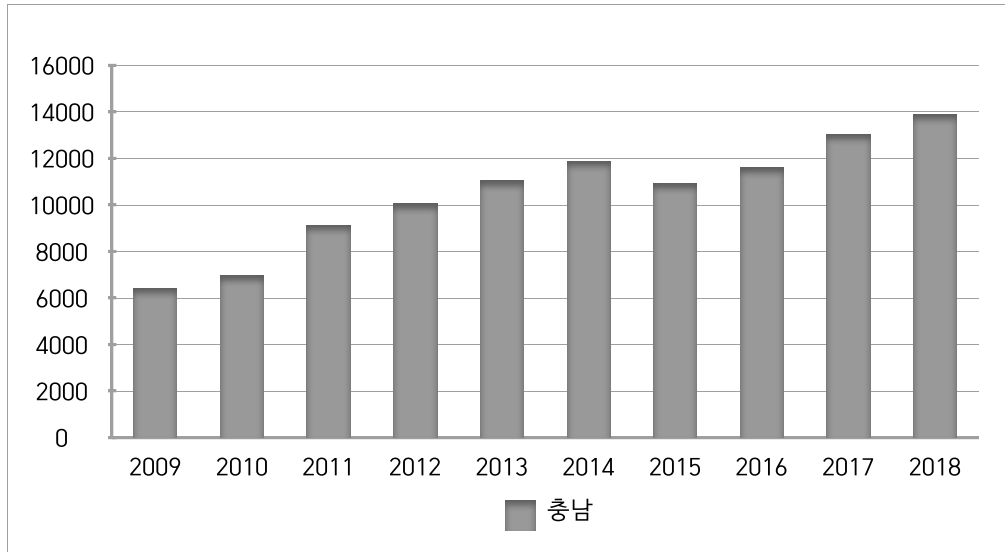
〈표 6〉 충청남도 거주 외국인 주민 인구 현황

구분		인구수(명)	점유율(%)
한국 국적 미취득자	외국인근로자	33,806	32.2
	결혼이민자	8,162	7.8
	유학생	6,149	5.9
	외국국적동포	15,100	14.4
	기타 외국인	21,535	20.5
	소계	84,752	80.8
한국 국적 취득자		7,474	7.1
외국인 주민 자녀(국내출생)		12,628	12.1
총계		104,854	100

출처: 충청남도 통합복지(2018). 여성가족현황-충남도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현황.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CPWMENU00235

지난 10년 동안 충남의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2012년 1만 명을 넘었고, 2018년 기준 현재 13,868명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8〉 참고).

[그림 8] 2009~2018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자녀 수 변화 추이



출처: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2018).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5&pageSeq=289>

2017년 기준 충남 다문화가족 18세 이하 자녀의 수는 13,021명으로 각 연령대별 구성 인원과 그 비율은 <표 7>과 같다.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6,543명으로 50.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만 7부터 12세까지는 5,130명으로 39.4%를 차지했다. 이로써 12세 이하 자녀의 비율이 89.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 취학연령인 만 13~15세는 6.6%, 고등학교 취학연령인 만 16~18세는 3.7%로 10.3%가 이른바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 2017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구성

구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계
인원수(명)	6,543	5,130	864	484	13,021
비율(%)	50.3	39.4	6.6	3.7	100

출처: 충남다울림(2017). 결혼이민자 자녀현황-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http://www.dawoolim.net/ko/pages/view/194>. 자료재구성

2.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충남 다문화 청소년 및 관련 정책 현황

2020년 8월 11일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담당 연구진(선임연구위원)과 충남의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한 자문회의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청소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다문화’와 관련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파악이 필요하다.

- 다문화가족 : 법적·정책적 용어 / 관련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국적법」 제2, 3, 4조⁹⁾
- 다문화가정: 학술적·일반적 용어 / “서로 다른 국적·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다문화가정”¹⁰⁾

충남 내 다문화 청소년 관련 주요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결혼이주여성 대상이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다문화가정은 대체로 자녀 공개를 꺼리는 방어 기제가 있으며,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할 때 접근이 가능하다. 이들 다문화 청소년의 접근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체 업무가 과다하며, 외부의 관련 요청이 많아 외부기관 등에 대한 반응이 방어적일 수 있다.

교육청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를 원활하지 못하며 수직적인 서열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충남 지역사회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기관으로서 다른 부처들 가운데 위상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상호개입이나 부처간 연계가 부족하다.

충남의 다문화 청소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고등학교 취학연령의 청소년 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진로의 문제가 중요한데 진로 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기관과 수행기관이 일치되지 않고 상호

9) 출처: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10)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교류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직업상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들을 위한 학교 내 진로 탐색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충남은 천안시와 아산시에 다문화 정책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제3절 충남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1. 충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 15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각 센터는 지자체 또는 법인, 재단, 대학 등으로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8〉 충청남도 15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19년 1월 기준)

구분	지역	운영주체
1	천안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하늘중앙교회
2	공주	사회복지법인공주교 교육나눔
3	보령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4	아산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5	서산	서산시 복지재단
6	논산	학교법인 건양학원
7	당진	당진시 복지재단
8	금산	금산군
9	부여	부여군
10	서천	사회복지법인 윤정복지재단
11	청양	충남도립청양대학 산학협력단
12	홍성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 사회봉사회
13	예산	예산군
14	태안	태안군

구분	지역	운영주체
15	계룡	계룡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출처: 충청남도 통합복지(2019). 외국인주민지원.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CPWMENU0024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크게 기본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으로 총 3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사업

- 가족 :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프로그램, 가족 의사소통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아버지교육, 부모-자녀 관계 및 자긍심 향상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부모 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 지도 등
- 성 평등 : 배우자 부부교육, 배우자 이해프로그램, 예비·배우자 교육프로그램, 부부 갈등해결 프로그램 등
- 인권 : 다문화 이해교육, 인권 감수성 향상교육,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이주민과 인권 등
- 사회통합 :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워크넷, 새일센터·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 교육,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
- 상담: 가족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
- 홍보 및 자원연계 :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등(교통 불편, 임신·출산 직후·가족 돌봄, 장애 등으로 인해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해당 지역 : 15개소(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사업내용 : 언어발달 교육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에게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언어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해당 지역 : 13개소(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사업내용 :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또한, 각 지자체에서 실행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인 '다문화 어울림 지원사업'이 충남에서도 15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 가족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지원한다.

- 필수사업(6개) :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인재 양성,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대표과제, 세계시민교육(상호문화이해교육), 나를 찾아 떠나는 외갓집 여행, 대국민 인식개선 다문화신문 발간사업
- 선택사업(4개) : 한국의 문화적응 프로그램,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지원,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 운영, 다문화 이해 현장체험 및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충남 서산시 '다문화 어울림 지원사업' 세부사업의 예

-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 :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 일반 시민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이주 여성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 자녀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학습향상,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 입국 초기 한국어 교육 : 입국 초기 언어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기초 교육실시

-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다문화 동아리 지원 : 결혼이민자가 참여한 다문화 동아리를 구성 강사 및 활동 지원
- 가족 데이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이해, 책임부여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사업발표 및 보고회 : 연간 각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재능을 발휘하고 평가하는 행사 개최

위와 같은 충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행되는 사업내용을 정리하면,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사업이 다양하지 않으며 대체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전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의 문화적·사회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세부프로그램 및 사업의 내용을 기획하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충남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인터뷰 결과 내용

- 인터뷰 대상: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 실무자,
- 각 인터뷰 대상에게 서면으로 질문지를 전달하여 응답을 회신 받음¹¹⁾. 질문내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서면 인터뷰 질문내용

	질 문
1	귀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2	귀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현황은 어떻습니까?
3	이 청소년들이 귀 지원센터 이외에도 이용하는 지역사회 내 기관은 어디입니까?

11) 2020년 본 연구기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어 정부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현실적으로 대면 인터뷰가 어려워 서면 인터뷰로 전환하여 진행했음

	질 문
4	이들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체로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5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6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직업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7	지역사회 내 필요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는 약 100명이다. 프로그램은 총 5개로 ‘호두 까기 바이올린’, ‘영어랜드’, ‘진로 탐색 꿈틀’, ‘다문화영재기·재능발현프로젝트’, ‘중도입국 자녀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었다.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하는 기타기관은 지역 아동센터이다. 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 소속감에 대해 청소년들과 직접적인 인터뷰를 진행한 적은 없으나 2020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적응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81.6%가 긍정적(매우 잘 적응, 잘 적응)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질문한 결과, 93.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본 센터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를 통해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센터의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에게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공부(성적, 적성 등)’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진로·진학 및 직업’이 22.8%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충남의 다문화 청소년의 고민은 일반적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부’로 나타났으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 청소년 겪는 어려움은 개인마다 상이하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한국어가 서툰 것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따라서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비 다문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탐색하는 경우도 있다.

센터의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육관련)바이올린, 댄스, 축구, 미술 등’이 5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가족통합관련)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44.9%), ‘(교육관련)영어교육’

(24.4%), ‘(교육관련)학습’(23.6%), ‘(교육관련)진로’(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4장 해외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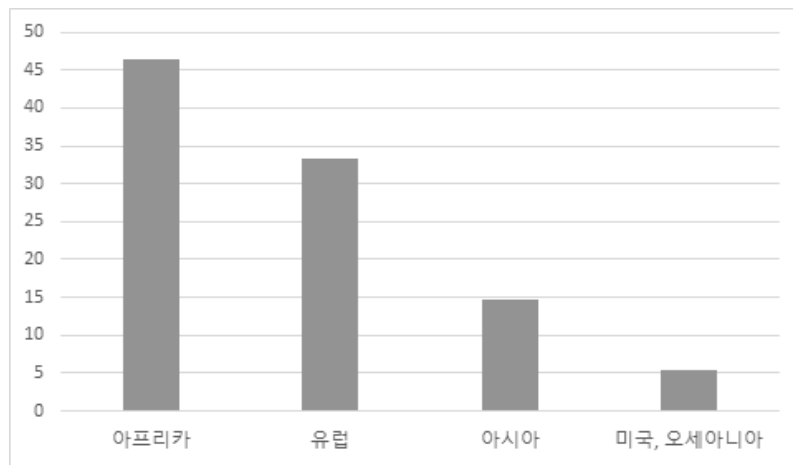
제1절 프랑스 이민자 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사례

1. 이민자 인구 현황 및 특징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프랑스에 이주민은 6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9.9%에 달한다. 이주민들 중에 250만 명인 37%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 4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4%. 이 중 420만 명은 프랑스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의 46.5%가 아프리카 출생이다. 33.3%가 유럽에서 태어났고, 아시아에서 14.7%가 태어났다. 이주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알제리 12.6%, 모로코 12%, 포르투갈 9%, 튀니지 4.5%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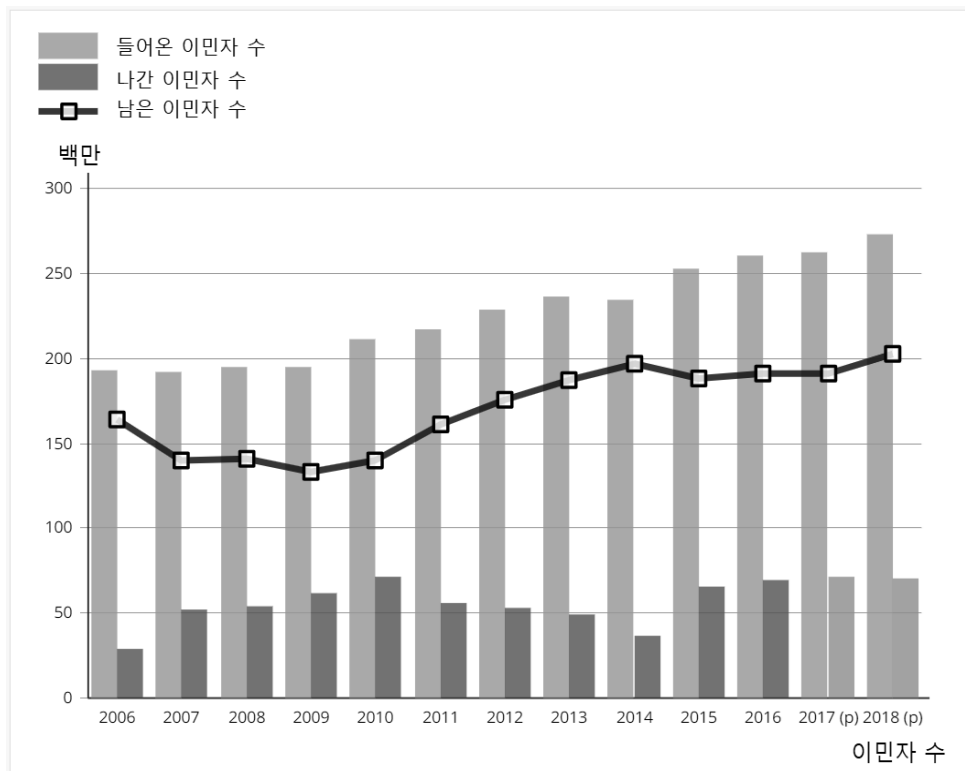
[그림 9] 프랑스 이주민 출신 국가



출처: Insee, estimations de population 2019.

2006년에서 2018년 사이 프랑스에 들어온 이주민은 193,400명에서 273,000명으로 증가하였다. 프랑스를 떠난 이주민은 평균적으로 4명 중 1명으로 이 경우는 주로 학업을 마치고 돌아간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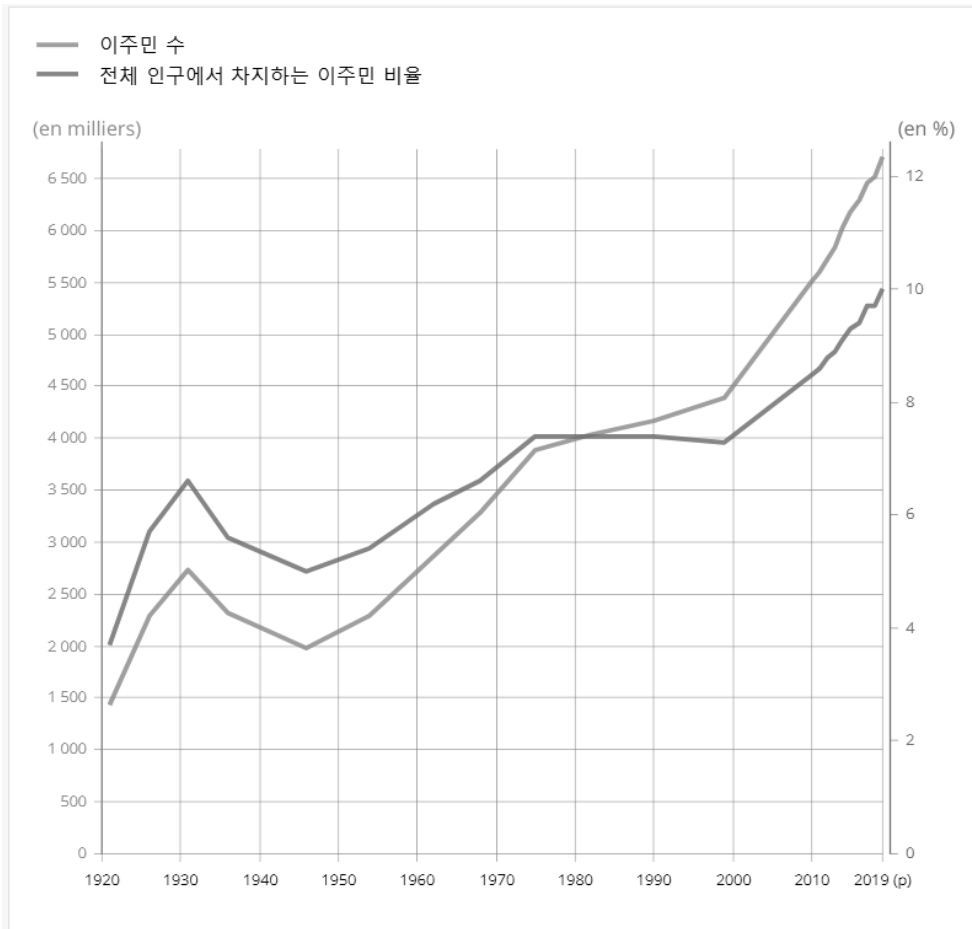
[그림 10] 프랑스 이주민 출입국 현황



출처: Insee, estimations de population, des flux d'entrées et de sorties.

프랑스 이주민의 숫자는 194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1946년에는 이주민이 전체 인구에 5%, 1975년 7.4% 그리고 2019년 9.9%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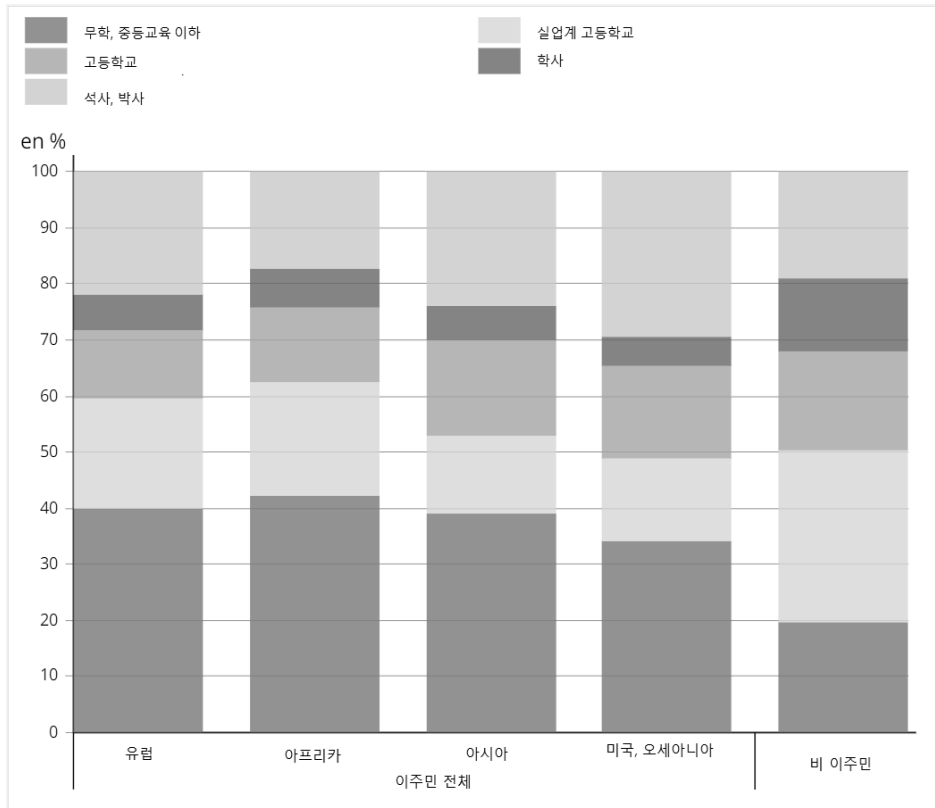
[그림 11] 프랑스 이주민 증감 현황



출처: Insee, recensements de la population et estimations de population.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학력은 중등교육 이하를 받은 이들이 많다. 고등교육을 받는 이들은 비이주민들과 비교해서 저학력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은 노동시장 진출 과정에서 전문직보다는 단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2] 프랑스 이주민 학력



출처: Insee, enquête Emploi 2019.

최근 프랑스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학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프랑스에 들어온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학업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랑스에서 이민자 혹은 이민자 후손들이 직업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이민자들의 실업률이 프랑스인들보다 높다. 이민자들의 학력이나 업무능력은 프랑스인들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질 낮은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민자들은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을 하지 못하거나, 실직 상태로 오래 머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민자 후손들은 학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10〉 학위에 따른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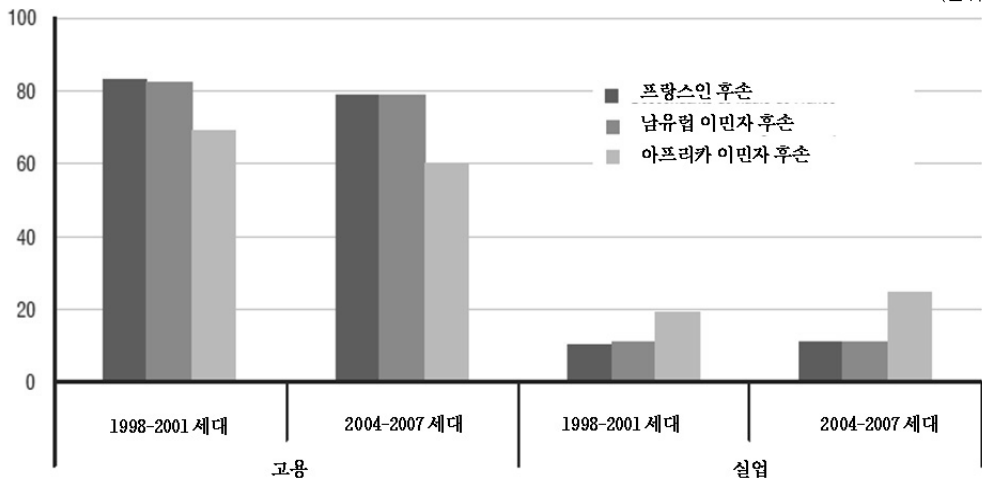
	고등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	무학
부모가 프랑스인인 프랑스출생	4.7	6.1	8.9	14.1
유럽연합 소속 이주자	7.4	8.0	7.0	8.9
유럽연합 이외 국가 출신의 이주자	14.8	18.0	24.4	23.8

출처: Ministère de l'Immigration - Données 2011

아래 [그림 13]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 국적의 유무나 프랑스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부모의 출신이 어디인지에 따른 자녀의 교육 이후 3년 동안 활동 상태를 봤을 때 프랑스인 부모의 후손들에 비해서 유럽 출신 이민자들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아프리카 이민자 후손들의 고용률은 떨어지는 반면 실업률은 현저히 높음.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더 커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민자와 비이민자 간 실업률의 차이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의 굳어진 문제라는 지적이 크다.

[그림 13] 1998~2004 졸업 이후 3년간 이주자 자녀 활동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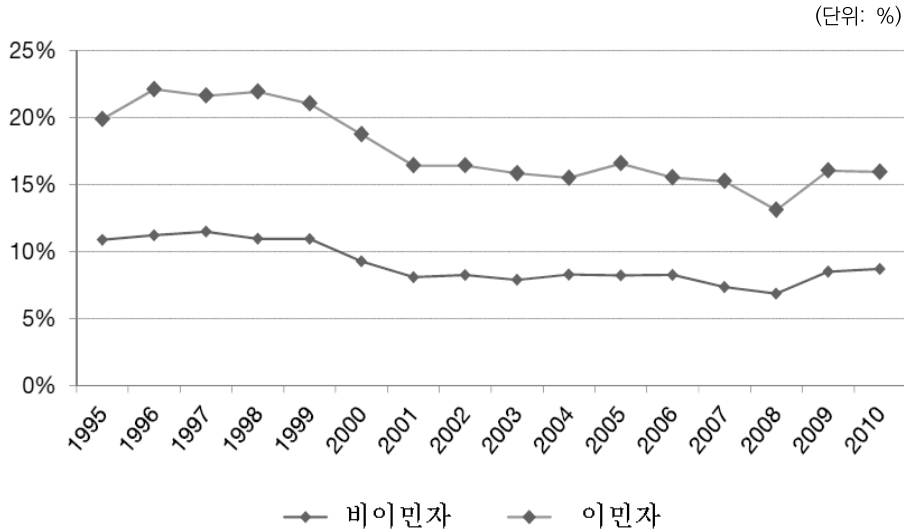
(단위: %)



출처: Insee, enquête Emploi 2019.

아래 [그림 14]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실업률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프랑스 경제의 경기변동에 따라 함께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1995~2010 사이 이민자와 비이민자 실업률 변화



출처: INSEE, enquêtes Emploi 1990-2010 (Enquête Emploi annuelle jusqu'à 2002, Enquête Emploi en continu à partir de 2003); traitement: CAS.

프랑스인 부모님이거나 유럽 출신 부모님을 둔 후손들은 연 소득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아프리카나 다른 출신 국가들의 부모님을 둔 후손들은 소득에서 차이 발생한다. 특히 아프리카 출신 부모님을 둔 후손들은 소득이 가장 낮다.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자 혹은 이민자 후손들은 노동시장에서 자신들의 경력, 능력, 교육수준 등 개인적 특성에 맞는 노동활동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이주민 노동자로서 처해있는 열악한 상황에 맞춰 겨우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민자 혹은 이민자 후손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결국 프랑스 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면 이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머물게 되고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표 11〉 생활 수준 비교

	인구 비율 (%)	평균 연 소득 (유로)	현 소득 중앙값 (유로)
프랑스 부모를 가진 프랑스인	82	22,810	19,630
이민자 직계 후손	10	19,570	16,750
- 유럽 출신 부모님을 둔 후손	5	22,550	19,050
- 아프리카 출신 부모님을 둔 후손	3	15,960	13,860
- 다른 국가 출신의 부모님을 둔 후손	2	17,150	14,360
이민자	8	17,820	15,190
합계	100	22,110	18,990

출처: Insee ; DGFIP ; Cnaf ; Cnav ; CCMSA, enquête revenus fiscaux et sociaux 2008.

2. 프랑스 이민정책의 변화

프랑스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산업사회에서 성장과 경쟁에 중요한 요소인 노동력 부족 때문이었다. 산업사회에서 프랑스는 이민자들 덕분에 부족한 노동 인구를 충당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심각한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후 복구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이민자들로 충당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 당시 프랑스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이민자들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이민자를 위한 지원정책들이 미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경제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1974년 이후에는 새로운 이주가 어려워지고, 이미 프랑스에 정주한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주자들의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을 이끌어 오던 산업사회가 끝나고 저성장의 탈산업사회로 프랑스가 들어서면서 노동력을 시장에서 팔아 살아가던 이민자들이 더는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의 이주민 발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려는 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주민은 남부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출신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에 유럽경제의 호황기가 끝나자 프랑스는 이주노동자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족재결합(regroupement familial)’이라는 법령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주 배경 가족들의 입국과 체류를 허가했다.

임금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이민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에 들어온 이주민들은 대부분 가족 합류를 위한 노인 혹은 유아의 입국이 대부분이었다. 이 전에는 대부분 노동력을 가진 경제활동인구 중심으로 이동이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유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프랑스 사회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트게 되고 삶이 팍팍해진 이민자들이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이에 대한 비이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인들과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aing) 정부는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늘어났고, 이들의 수용에 대한 프랑스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논쟁이 거세졌다. 사회당 대통령 후보였던 프랑수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은 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면서 1988년 재선에 성공하고, 1991년에는 이민문제를 프랑스 국내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의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 불법이주민들의 노동이나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보장이 조금씩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1999년부터는 ‘서류 없는 사람들(sans-papiers)’에 대한 합법화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민자들의 수용과 관련하여 프랑스 내부에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주의 등의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프랑스가 이주민들을 프랑스 사회로 유입하려고 한 이유에는 불법으로 머물고 있던 이주민들의 노동을 양성화 하고, 세수 확보라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효과는 미비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한편 2003년에 프랑스는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불법이민관련법’ ‘이민과 통합 관련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민자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이후에는

사회적응에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노력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선택적’으로 이민을 수용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이민은 장려하고, 불법이민에 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정부와 사회는 전생애적 관점에서 이민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프랑스 사회에서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상호인정 관계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프랑스 국민들과 이민자들 간 상호소통과 교감을 통한 상호인정을 이루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래전부터 프랑스에서는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정주형 이주민들에 대한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과 관련된 ‘공화주의적 동화모델(le modèle républicain d’assimilation)’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프랑스적인 문화와 규범과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민 1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민 2세, 3세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야엘 브린봄(Yaël Brinbaum)와 사브리나 이세난(Sabina Issehnane)은 이민자 후손들의 최초 일자리의 질(Qualité)에 대한 연구에서 마그레브(Maghreb)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이 프랑스나 남유럽국가 출신보다 훨씬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는 문제를 지적한다.

올리비에 몽소(Olivier Monso)와 프랑스와 글레이즈(François Gleizes)는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언어구사능력이나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접근성에 대한 연구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이민자(Immigré)와 비이민자(Non-immigré) 간의 실업률이나 고용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한편,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이민자가 비이민자에 비해서 실업률이나 고용률에서 뒤처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한편 스테판 주노(Stéphane Jugnot)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들의 학업 이후 취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학업 이후 5년 안에 비이민자들의 자녀들은 82%가 직업을 갖게 되는 반면, 이민자 자녀들은 61%만이 취업을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이민자란 꼬리표가 여전히 프랑스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파니 미콜(Fanny Mikol)과 클로에 타안(Chloé Tavan)은 1990~1999년 사이에 이민자들이 취업 이후에도 승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터키, 아시아, 튀니지에서 온 이들은 높은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였다.

3. 이민자 가정 청소년의 교육 및 진로지원 정책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은 프랑스 사회에 적응이 어려웠고,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범죄 및 폭력의 증가는 프랑스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었다.

프랑스는 교육에서 공화주의와 인권과 평등에 입각한 시민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문화 간 교육(education interculturelle)’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쓰고 있으며, 소수 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기회균등과 평등을 통한 교육적, 사회적 권리의 정당성을, 다수 집단의 청소년은 다름과 공존에 대한 이해를 배우며 자아와 타자 안에서의 복수적 가치를 수용하고, 문화·종교·인종의 다름과 차별, 배제에 대한 객관적 기술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또 교육정책에서 이주 청소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다른 청소년들과 긍정적인 차별정책으로 포섭하여 낙인감을 제거한 학습자 위주의 교육정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정책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학업성공프로그램(le programme de reussite educative, PRE) : 다양한 전공의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2세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심리적, 보건 위생적, 환경적, 가정적 문제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해결 방법이 모색되고, 교육적 차원에서 각 학생들이 학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사회적 요건을 제공한다.
- 언어·문화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Les enseignants en langue et culture d'origine, ELCO) : 프랑스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터키, 포르투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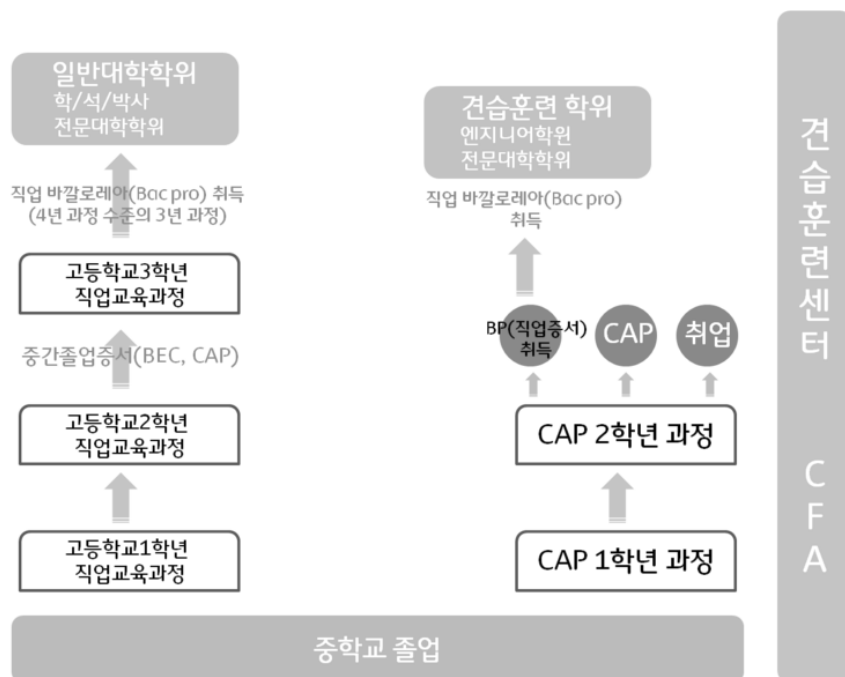
스페인, 이태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9개 국가들이 프랑스 교육부와 ELCO 협정을 맺고 모국어와 제 2 외국어를 쉽게 습득하고 출신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모국어) 구조화하기, 출신국 문화에 대한 가치 부여하기, 타문화 배경 출신 청소년 개개인의 발전에 기여하기 등이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국가 문화권 출신 학생이거나 타문화 배경 출신 학생인 경우 참가가 가능하며, 참여교사는 자국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충분히 가진 교육경력자로 배정하고 있다.

- 클라스·아틀리에 연계 정책(Classes et atelier relais) : 학생이 학교 밖에 있는 동안 다양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다. 특별지도교사, 교육전문가, 기타 교육관련 인력,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지도교사 팀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회적 교양이 결여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예절 태도와 인내, 자제심 등을 가르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궁극적으로 학생 개개인과 교사들 간의 관계를 통해 이들의 자질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발견하는가에 중점을 둔다. 학업포기 혹은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해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학교로 돌아가 학업지속 혹은 진로방향 모색을 최종목표로 한다. 아틀리에에는 공교육기관 이외에 지역사회주체와 보완적인 교육주체기관 혹은 지역사회 교육연합기관들이 함께 지행하며 최소 4주에서 16주 동안 진행된다.

한편 프랑스 교육제도는 진로지도를 매우 중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사회로 나오기 전에 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졸업증서(수료증)(diplôme professionnel)의 취득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직업교육수료증은 직업자격증명서(CAP: 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직업교육수료증(BEP: brevet d'enseignement professionnel)과 실업대학 입학자격(baccalauréat professionnel) 등이 있다. 직업 관련 졸업증서(수료증)들은 직업고등학교(lycée professionnels) 또는 견습직업훈련(apprentissage professionnel)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제도 내에서 이뤄진다. 직업고등학교(LP) 교육과 견습생 직업훈련소(CFA: Centre de formation d'apprentissage)'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학교제도의 낙오자', 즉 학교로부터 버림

받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형태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실무담당자(personnels d'exécution)를 양성하는 데서 출발한 직업교육은 1950년대 말까지 노동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직업고등학교(LP) 학생이나 견습생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할 경우 커다란 이질성(hétérogénéit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직업교육 수요자 신분의 다양성은 학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직업적 지위의 상이함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직업교육을 통해서 초등교육만을 이수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상승을 이룰 수 있었고, 숙련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 학제로 중3 때 진로를 첫 번째로 결정하게 된다. 프랑스는 중학교 과정이 총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2년을 마친 뒤에, 나머지 2년 동안 직업교육과정을 선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중2 때부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받고, 교육을 받는다. 중학교 때는 진로탐색과 기초직업교육이 진행되고, 고등학교부터 직업교육이 이뤄진다.

[그림 15] 프랑스 직업교육 과정과 체계



출처: 전현중, 이용순, 2014, 프랑스 중등직업교육의 일학습 연계 체제와 시사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직업교육은 학생이 한 직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 국가 학위 특히 전문적성증서(CAP)¹²⁾, 직업교육증서(BEP)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 과정 중에 3-10주 의무적인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이 학교교육기관 및 학교 이외의 직업교육기관(졸업생 및 중퇴,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학위(졸업증서)를 얻게 되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뒤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야만 해당학위(졸업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즉 일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학력체계와는 다르지만 서로 연계가 가능한 별도의 직업능력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즉, 프랑스의 학교 직업교육제도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업훈련 내용이나 기간이 달라지는 등 유연할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과 다수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직업교육은 노동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 등 계속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4. 시사점

프랑스는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진 만큼 이민자와 관련된 사회정책이 잘 발달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인과 이주해 온 이민자들 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프랑스 이민가정 자녀들은 프랑스 국적을 갖고, 프랑스 사회의 작동논리를 체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은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프랑스 공교육의 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성 교육, 사회적 일상 교육, 시민도덕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프랑스 사회에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 차원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12) BEP는 CAP보다 다양한 직업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직업 자격이란 점에서 CAP와 그 차이점이 있음. CAP와 마찬가지로 일반교육, 기술교육, 실습을 실시. BEP 취득자들은 향후 취업을 하거나 상위 자격인 '직업바칼로레아' 또는 '기술바칼로레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음.

프랑스 이민자가정 청소년은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 내에서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 수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진로 관련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이주민가정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연계를 통해서 이뤄진다. 때문에 프랑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육과 돌봄의 중심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를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작동함으로써 청소년의 교육과 돌봄이 이뤄진다. 이러한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업성취나 학교환경개선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이 가진 사회적 빈곤의 악순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제도적 개선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을 토대로 구축된 프랑스 교육연계망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와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통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역량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제2절 독일 이민자 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사례

1. 이민자 인구 현황

1) 전체 이주배경자 인구 현황

독일에서 이민자에 대한 명칭은 ‘이주배경 있는 자(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또는 ‘이주배경자’이며 이는 이민자의 속성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배경자는 “자신 또는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경우 이민배경이 있는 자”로서 외국인, 귀화한 이주자, 재입적자, 독일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자 4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독일 연방통계청, 2020).

- 독일국적자 중 이주경험이 없는 자 : 입양, 독일출생자로서 귀화한 자
- 독일국적자 중 이주경험이 있는 자 : 입양, 독일출생자로서 재입적한 자
- 외국국적자 중 이주경험이 없는 자 : 주로 부모가 이주한 후 독일에서 출생하였으나 18세 이후 독일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 외국국적자 중 본인 이주경험이 있는 자 : 이주하여 독일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2019년 기준 독일의 이주배경자 수는 약 2,125만 명으로 전체인구 8,185만 명 중 26.0%를 차지(〈표 12 참고).

- 독일국적자 : 약 1,113만 명(전체 이주배경자의 52.4%)
독일국적자 중 이주 무경험자는 약 600만 명으로 53.9%를 차지함
독일국적자 중 이주 유경험자는 약 513만 명으로 46.1%를 차지함
- 외국국적자 : 약 1,012만 명(전체 이주배경자의 47.6%)
외국국적자 중 이주 무경험자는 약 156만 명으로 15.5%를 차지함
외국국적자 중 이주 유경험자는 약 856만 명으로 84.5%를 차지함

〈표 12〉 2019년 독일 유형별 이주자 배경

(단위: 천 명)

구분	이주 무경험	이주 유경험	계
독일국적자	6,000	5,125	11,125
외국국적자	1,564	8,556	10,120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2020). 자료재구성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07/PD20_279_12511.html

독일 16개 연방주 중에 2019년 기준 이주배경자가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덴-뷔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니더작센, 베를린, 라인란트-

팔츠로 총 7개주이다(〈표 13〉 참고). 이들 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자는 약 186만 명으로 전체 이주배경자 수의 약 87.8%를 차지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이주배경자는 약 545만 명인데 이 지역은 독일에서 유명한 공업지대(옛 탄광, 철강산업 등)로 1960년대부터 이주한 외국노동자 1세대를 비롯하여 그 후세대들이 정착한 곳이다. 또한, 밀집된 중소도시에 많은 학교가 분포되어 있어 젊은 층의 외국국적자가 많다.

〈표 13〉 2019년 독일 연방주별 이주자 배경

(단위: 천 명)

연방주	독일국적자		외국국적자		계
	이주 무경험	이주 유경험	이주 무경험	이주 유경험	
바덴-뷔템베르크	1,068	898	296	1,441	3,703
바이에른	880	752	246	1,464	3,343
베를린	322	198	76	599	1,194
브란덴부르크	47	45	12	107	212
브레멘	64	56	18	109	247
함부르크	169	148	41	262	619
헤센	617	499	166	854	2,136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	28	27	8	66	128
니더작센	497	495	112	646	1,751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1,640	1,419	444	1,947	5,449
라인란트-팔츠	322	295	64	390	1,071
자알란트	56	51	17	95	218
작센	78	64	17	180	339
작센-안할트	36	31	8	99	173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144	124	31	200	499
튀링겐	31	25	9	98	163
계	6,000	5,125	1,564	8,556	21,245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2020). 자료재구성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grationshintergrund-laender.html>

2) 이주배경자 청소년 인구 현황

2019년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만 20세 미만의 이주배경자는 총 581만 명으로 각 연령대별로 해당 합계 인구수는 비슷한 수준이다(〈표 13〉 참고).

독일국적자 중 이주 무경험자 수가 유경험자 수의 약 24배로 월등히 많다. 만 19세 미만은 독일에 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독일국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주 무경험자들은 대부분 부모가 이주하여 독일에 출생한 자녀들이 이에 해당된다. 외국국적자 중에는 이주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약 1.5배 많다(〈표 14〉 참고).

〈표 14〉 2019년 독일 20세 미만 이주자 배경

(단위: 천 명)

	독일국적자		외국국적자		계
	이주 무경험	이주 유경험	이주 무경험	이주 유경험	
5세 미만	1,043	19	357	113	1,532
5~10세 미만	960	37	121	330	1,450
10~15세 미만	974	41	88	340	1,442
15~20세 미만	895	68	123	301	1,386
계	3,872	165	689	1,084	5,810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2020). 자료재구성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grationshintergrund-alter.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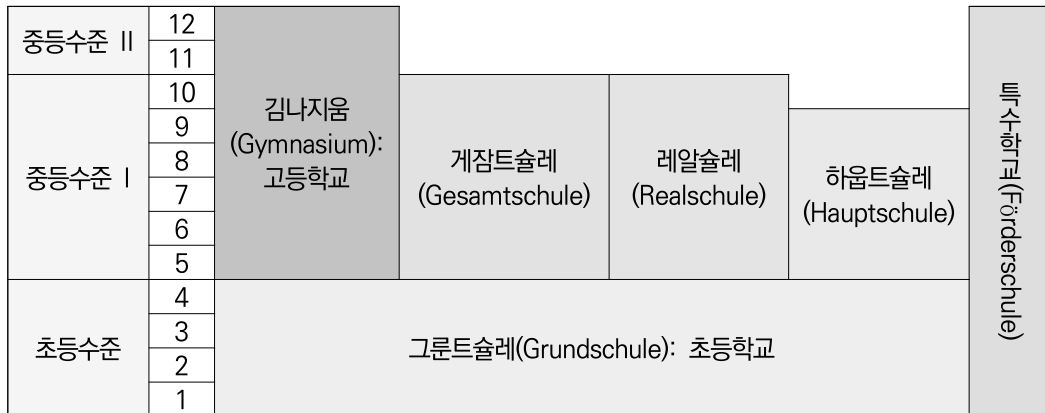
2.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 현황

1) 교육 참여 현황

독일의 공교육시스템은 중등교육까지 전체 12학년까지 이루어지는데, 초등수준인 그룬트슐레 4년, 중등수준(I, II) 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 계잡트슐레, 레알슐레, 하웁트슐레 6년~8년으로 구성된다. 특수학교(Förderschule)는 발달, 교육 또는 학습에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그림 16〉 참고).

의무교육연령¹³⁾ 내에 해당하는 이주배경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해당 학교에 배정된 후 언어 이해도나 학습능력에 따라 ‘보충반(Förderklasse)’에서 적응 기간을 갖고 일반 학급에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16] 독일 공교육 시스템(초등~중등교육)



2017년 기준(〈표 4-11〉 참고) 독일의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정도는 11학년까지 수료한 비율이 39.6%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25.7%의 이주배경 청소년이 9학년(주로 하웁트슐레 졸업)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이주배경이 없는 청소년의 교육정도는 중급수료 48.7%,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마친 청소년은 28.2%로 중급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청소년은 약 77%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중급수준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한 비율은 59.0%로 이주배경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과 비교하여 18.0% 적게 나타났다. 직업학교입학자격이 주어지는 9학년까지 교육과정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비율이 25.7%로 이주배경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보다 거의 2배가 높다. 수료결과가 없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비율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약 2.7배 높아 15.3%를 차지한다.

13) 독일의 의무교육기간은 연방주별로 약간 상이하지만 대체로 9~10년(9학년 또는 10학년)까지이다.

〈표 15〉 2017년 독일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교육수준

(단위: %)

수료종류	대학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시험(Abitur)	중급수료 (11. Klasse)	직업학교입학자격 (Hauptschule, 9. Klasse)	없음
이주배경 없는 자	28.2	48.7	17.4	5.7
이주배경 있는 자	19.4	39.6	25.7	15.3

※ 조사대상: 만 15세~19세 까지

출처: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2019). 「Deutschland kann Integration-Potenziale fördern, Integration fordern, Zusammenhalt stärken」, 12. Bericht, p.160. 자료재구성

2) 경제활동 참여 현황

독일 연방통계청(2019)에 따르면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이주배경자의 평균 실업률은 6.6%로 이주배경이 없는 사람의 비율보다 2배 이상이 높다(〈표 4-12〉 참고).

전체 이주배경이 있는 자 중에 남성의 실업률은 여성(5.7%)보다 1.5%p 높아 7.2%를 나타낸다. 특히, 이주배경자 중 남성 외국국적자의 실업률은 8.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배경자 중에서 외국국적자의 평균 실업률은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주경험이 없는 자의 평균 실업률이 7.3%를 기록하고 있다.

〈표 16〉 2017년 독일 이주자 실업률

(단위: %)

	남성	여성	전체(평균)
이주배경 없는 자(전체)	3.3	2.8	3.1
이주배경 있는 자(전체)	7.2	5.7	6.6
독일국적자	5.1	4.3	4.7
외국국적자	8.8	7.1	8.1
이주 무경험	7.9	6.5	7.3
이주 유경험	7.1	5.5	6.4

※ 조사대상: 만 15세~64세 까지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2019). 「Migration und Integration-Integrationsindikatoren 2005-2017」. 자료재구성

3.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지원 정책

독일연방정부(Bundesregierung)는 2007년 ‘국가통합계획(Nationaler Integrationsplan: NIP)’을 수립하였다. 이 통합계획은 독일의 모든 행정단위(연방, 주, 지방)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이주배경자의 통합을 위한 조치와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표 4-13〉 참고). 통합계획(NIP) 내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도 실행되었다.

〈표 17〉 이주 배경자를 위한 국가 통합계획(NIP, 2007)

연방(Bund)차원의 조치	지방정부(Kommunen)차원의 조치
교육을 통한 통합	지역사회의 과제로서 통합
언어를 통한 통합-연방의 통합교육과정	지역네트워크의 지원
직업교육과 직업생활에서 통합	행정영역의 상호문화적 개방성 지향
학문영역에서 통합	사회참여·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
여성을 위한 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언어와 교육
현장에서의 통합	직업영역에서의 통합
문화적 통합	사회적 공간속에서 통합
스포츠를 통한 통합	지역사회 내 민족별 경제 지원
미디어를 통한 통합	외국인 적대감에 대항하는 사회참여 강화
시민참여를 통한 통합	정보전달과 통합정책에 대한 평가

출처: Die Bundesregierung /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2007). 「Der Nationale Integrationsplan: Neue Wege-Neue Chancen」. 자료재구성

이주배경자를 위한 통합조치로 기본적으로 ‘통합교육과정(Integrationskurs)’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을 위한 통합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규정: 통합규정(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Integrationskursen für Ausländer und Spätaussiedler: Integrationsverordnung; IntV)” 제13조 제1항 1문: 2004년 12월 13일 실행, 2020년 6월 19일 최종개정되었다.

“연방영토 내 외국인의 거주, 고용 및 통합에 관한 법률: 체류법(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Aufenthaltsgesetz; AufenthG)” 제43조 제4항: 2004년 7월 30일 실행, 2008년 2월 25일 재개정, 2020년 6월 19일 최종개정 되었다.

“연방난민법(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Bundesvertriebenengesetz; BVFG)” 제9조 제1항 5문: 1953년 5월 19일 실행, 2007년 8월 10일 재제정, 2019년 5월 6일 최종개정 되었다.

통합교육과정의 의무참여대상자에는 노동목적 체류허가, 가족이주에 따른 체류허가, 인도적 근거에 의한 체류허가, 장기적 체류권한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체류법 제44조 제1항, 2항), 독일어 이해력 또는 충분한 독일어 능력이 없는 자(체류법 제44a조 제1항 1문)가 해당된다.

통합교육과정에는 ‘청소년 통합교육과정(Jugendintegrationskurs)’도 포함되며 참가 대상자는 더 이상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 통합교육과정 참가시점에 27세 미만인 자이며, 코스단위별 최대 인원은 15명까지로 제한된다(BAMF, 2015:29).

전체교육과정은 10단위, 수업시간은 총 1,000시간(각 시간 단위는 45분으로 계산함)으로 구성된다. 기초어학과정 300시간, 고급어학과정A 300시간, 고급어학과정B 300시간, 일반상식과정 100시간이며 반복과정은 고급어학과정B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총 300시간의 재교육을 실시한다(〈표 4-14〉 참고). 통합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기초어학과정(Basissprachkurs) : 총 300시간
- 중간시험(Zwischentest)
- 고급어학과정A(Aufbausprachkurs A) : 총 300시간
- 중간시험(Zwischentest)
- 고급어학과정B(Aufbausprachkurs B) : 총 300시간
- 독일어시험(단계 A2→B1)¹⁴⁾
- 반복과정(Wiederholung) : 총 300시간
- 독일어시험(단계 B1→B2)

14)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일반적인 어학과정의 단계는 A1, A2, B1, B2, C1로 구성된다.

- 일반상식과정(Orientierungskurs) : 총 100시간(모듈영역: 민주주의 정치, 역사와 책임, 인간과 사회)
- 수료시험(Abschlusstest) : “독일에서의 생활(Leben in Deutschland)”

〈표 18〉 청소년 통합교육과정 구조

코스 단위	1	2	3	4	5	6	7	8	9				10
시간 단위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	200	300	100
교육 과정	기초어학과정			고급어학과정A			고급어학과정B			반복과정			일반상식 과정

출처: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2015). 「Konzept für einen bundesweiten Jugendintegrationskurs」, p.15

독일의 공교육시스템 안에서 중등수준 2단계 과정 이후에 청소년들의 진로방향은 고등교육(Hochschule) 또는 직업교육(Ausbildung)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직업교육을 위한 독일의 직업교육제도는 듀얼시스템(Duales System), 학교·직업훈련시스템(Schulberufssystem), 직업전환영역(Beruflicher Übergangssektor)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Deutsches Jugendinstitut, 2020).

- 듀얼시스템 : 직업학교(Berufsschule)에서 교육과 회사(Unternehmen)에서 직업 훈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방차원에서 실시되는 제도이며 구인 결정권은 회사에게 주어진다. 대상자에게 법적으로 특정한 학교졸업증명이 요구되지 않지만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취업허가서(Arbeitserlaubnis)가 필요하다.
- 학교·직업훈련시스템 : 법적으로 인정되는 직업훈련욕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학교교육과정이다. 입학 위해서는 일반학교 졸업 수준의 조건이 필요하다.
- 직업전환영역 : 제공되는 교육내용은 자격교육을 동반한 직업훈련 수준보다 낮은 교육내용이다. 즉, 공인된 수료 및 졸업증명이 아닌 직업교육 또는 직업 활동 기회를 얻기 위해 청소년의 개인역량 개선시키거나 일반학교 졸업자격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독일국적을 가진 청소년의 참여비율은 듀얼시스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2012년 53.3%, 2017년 53.4%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다. 학교·직업훈련시스템과 직업전환 영역에서는 각각 2012년 22.3%와 24.4%, 2017년 23.5%와 23.1%로 두 영역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Deutsches Jugendinstitut, 2020). 반면, 이 두 영역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비국적자)의 참여는 2017년 기준으로 각각 12.4%, 30.3%로 학교·직업훈련 시스템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Deutsches Jugendinstitut, 2020). 이는 2012년 16.4%보다 낮은 비율로 입학조건과 교육과정내용을 고려할 때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수준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3가지 제도 가운데 이주배경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직업전환 영역(Übergangssektor)에서 제공되는 교육(Deutsches Jugendinstitut, 2020)으로 2012년 46.5%를 2017년에는 이 보다 더 증가하여 57.3%를 차지했다. 직업전환영역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직업준비조치(Berufsvorbereitende Maßnahmen: BvB)’로서 ‘직업준비의 해(BVJ)’와 ‘직업진입을 위한 자격교육(EQJ)’ 등이 있다(Azubu & Azubine.de, 2018).

- 직업준비의 해(BVJ) : BVJ는 독일 16개 주 중에서 바이에른(Bayern), 바덴-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헤센(Hessen), 니더작센(Niedersachsen),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작센(Sachsen), 튀링엔(Thüringen) 7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년 동안 학교교육을 추가로 받는 과정으로 일반수업과 실용수업(실습)이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한 회사에서 한 번의 실습이 진행되며 가끔 두 번의 실습도 가능하다. 실습을 통해 회사와 해당업무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며 정규 학교교육과정에 적응이 어려워 구직상황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내용이다. 주로 특수학교(Förderschule)를 다녔거나 하웁트슐레(Hauptschule) 졸업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중도자퇴 및 퇴학한 경우, 독일어 수준이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하다.
- 청소년 직업진입을 위한 자격교육(EQJ) : EQJ는 <사회법 제2편(SGB II)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 실행차원에서 25세 이하 실업상태의 청소년들을 고용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정책이다(Kühnlein & Klein, 2006). EQJ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이유

또는 직업으로 중개기회가 제한적인 청소년들, 직업훈련에 필수적인 자격이 없거나 학습능력의 약화, 사회적 차별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6~12개월의 기업 인턴십을 마치고 공인된 직업훈련장에서 견습을 준비한다(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2011). 이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들 역시 EQJ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활동 및 직업생활, 사회적 편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시사점

독일은 이민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이주배경자의 수와 비율을 고려하여 국가(중앙정부)차원에서부터 관련 법률과 해당자 지원정책,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주배경자 뿐 아니라 독일 자국민을 포함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연방(Bund)정부, 주(Länder)정부, 지방(Kommunen)정부 차원에서 이주배경자와 사회통합을 위한 업무과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각 정부의 역할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상호 연계를 통해 지원정책이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이주배경자 및 그 가족, 특히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독일연방 이주민 및 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이주·난민·통합(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연방정부 대표단’, ‘독일연방 교육·학술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독일연방 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등 다양한 부처의 연계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부처 간 연계정책을 통해 생존, 인권, 교육, 사회 및 문화활동, 경제활동 영역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생애 전체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원정책의 실행내용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기존제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가정, 교육, 생활환경 등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실제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지속가능하도록 추구하고 있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이 연구는 글로벌화 시대가 진전되면서 1990년대 이후 국제 노동력 이동의 변화에 따라 한국사회도 급속히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환경에서¹⁵⁾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청소년의 한국사회에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직업역량 강화 방안을 조사 분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충남의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2012년 1만 명을 넘었고, 2018년 기준 현재 13,868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갖추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충청남도는 ‘다문화 어울림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과 자녀 양육환경 지원 및 다문화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에 노력을 하고 있다. 다문화 어울림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역량을 교육시키는 데에만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사회 또는 충남지역에서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직업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하다.

15)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외국국적 소지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2009년 110만 명이 넘어서 이후 2018년에 2백만 명이 넘어서면서 9년 만에 두 배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이렇게 증가한 외국인 주민은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음.

2019년 7월에 있었던 ‘다문화정책 워크숍’(충남연구원, 2019)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 중심의 논의가 있었지만, 향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교육과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취약계층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진입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이 더 없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도 직업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직업훈련과 함께 진로상담, 직업 관련 정보제공, 구직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직업훈련에도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함께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청소년들은 직업훈련을 받기 이전부터 직업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청소년 직업훈련은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연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고용은 교육, 고용, 사회복지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때 효과가 크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한 프랑스, 독일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프랑스의 경우 이주민가정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프랑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육과 돌봄의 중심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로컬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가진 사회적 빈곤의 악순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연대와 협력정신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배경자의 수와 비율을 고려하여 국가(중앙정부)차원에서부터 관련 법률과 해당자 지원정책,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주배경자 뿐 아니라 독일 자국민을 포함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연방(Bund)정부, 주(Länder)정부, 지방(Kommunen)정부 차원에서 이주배경자와 사회통합을 위한 업무과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각 정부의 역할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상호 연계를 통해 지원정책이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부처 간 연계정책을 통해 생존, 인권, 교육, 사회 및 문화 활동, 경제활동 영역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생애 전체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원정책의 실행내용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기존제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 교육, 생활환경 등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실제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복지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으나 정책의 실행이 분절적이며, 통합적인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업훈련 교육을 시행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충남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매년 다문화 청소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 취학연령이 청소년 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진로 문제가 중요한데 진로 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기관과 수행기관이 일치되지 않아서 상호교류가 부족하고 진로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충남 다문화 청소년 관련 주요 기관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이라고 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결혼이주여성 대상이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다문화가정은 대체로 자녀 공개를 꺼리는 방어 기제가 있으며,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할 때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들 다문화 청소년의 접근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체 업무가 과다하며, 외부의 관련 요청이 많아 외부기관 등에 대한 반응이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경향이 있다. 교육청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를 원활하지 못하며 수직적인 서열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전국적 수준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이 각 부처별로 분절되어 실행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국가적 차원인 기본계획 틀 안에서 자치단체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은 공교육의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세계시민 교육프로 그램의 틀 안에서 교육하는 공감교육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프랑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크 간 연대하고 협력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체제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청소년의 학업 성취나 교육환경개선 뿐 아니라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충남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과 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감당할 사회적 빈곤의 악순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정리한 실현 가능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제2절 정책제언

첫째, 공공 도서관을 통한 다문화 청소년 독서 습관 강화.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습능력 신장을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생계에 바쁘거나, 그들 자신이 독서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올바른 지도를 해주는데 한계가 있다.

-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발달 단계에 맞는 한국어 도서를 제공 받거나, 도서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한국어가 미숙한 부모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된 도서를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자녀와 함께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돈독히 형성 할 수 있는 매개체로 독서 문화를 활용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 ‘공공 도서관’에서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가 구비 되고, 더 나아가 한국문학작품의 번역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한국문화를 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외국에서 온 부모의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결국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직무적성에 대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은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으로, 특히 직업 진로교육은 사회구성원 개인의 성공적인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중요하다.

- 그리고 학습능력이 비교적 낮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기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학습동기를 높이는 측면에서 직업진로교육이 중요하다.

-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직업윤리 및 직무 태도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사회로 진출할 때 한국 생활에 대한 낮은 행복감, 취업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 할 수 있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실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잘 선별하여 직업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가족문화의 배경이 일반 한국 학생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직업교육의 수요 항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또한 일부 고용인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부정적인 대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및 진로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직무 태도, 언어 습관이나 예절, 성실성과 근면성, 책임 의식 등 기본 소양과 관련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느낄지라도 기본 직무 소양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직무나 노동문화에 대한 교육을 교육기관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충남도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학습지도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취업에 필요한 정보 취득과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이뤄져야 한다.

셋째, 충남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가정 형편이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가 낮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업능력을 신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장점을 반영한 이중 언어 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장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이를 알리는 방법도 가능하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 이중 언어는 자존감과 자신감의 집결로 이중 언어를 자유롭게 쓰게 되면 외국 출신 부모도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자녀가 부모의 문화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유학생과 대학생을 활용한 ‘이중언어 캠프’ 개최도 가능하다. 유학생들은 이 기회에 한국의 학문과 문화를 배울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대학생들은 타문화에 대한 경험과 언어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 가족구조와 가족 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3 Oct. 24, 2003년, pp.473-497.
- 김기현, 이재희, 홍혜미 (2013). 결혼 이주 가정 및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탐색과 형성. 사회복지연구 vol.44, no.1, pp.165-192.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자율적 행동 영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원 (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 사회학연구, 16(3), 95-129.
- 김혜정, 유진이 (2009).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청소년 시설환경 제7권 제4호, 17-32.
- 권일남·김태균 (2009).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영역구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Vol.6. No.3. 67-89.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 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
- 남부현, 최충욱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3), 2012.9, 117-137.
- 류재윤, 이유경 (201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여량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4), 99-116.
- 무지개청소년센터 (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2019)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지방자치 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2).

- 손동기 (2016). 탈산업사회에서 이민자 유입에 대한 일고찰: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EU연구 제44호, 147-187.
- 여성가족부 (201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9.3.
- 양계민 (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외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8).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우복남 (2019). 충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우복남 (2019). 충남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의 효과 증진 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이소연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Vol.29. No.1 pp.179-208.
- 이성언·최유 (2006).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임경희 (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 여부와 성별에 따른 직업포부와 진로흥미 및 진로인식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6(2), 2013.6, 67-89.
- 임언,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명희, 정연순, 장석민 (2008).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현중, 이용순 (2014). 프랑스 중등직업교육의 일학습 연계 체제와 시사점, 직업교육연구 제33권 제1호, pp.179-199.
- 정영순, 유원선 (2003). 한국과 영국의 청소년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pp.71-96.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 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연구용역과제최종보고서.
- 충남연구원 (2019). 다문화정책 워크숍 자료집.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pp.163-194.
- 한국노동연구원 (2017).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2018).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5&pageSeq=289>
- 충남다울림 (2017). 결혼이민자 자녀현황-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http://www.dawoolim.net/ko/pages/view/194>
- 충청남도 통합복지 (2018). 여성가족현황-충남도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현황.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CPWMENU00235
- 충청남도 통합복지 (2019). 외국인주민지원.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CPWMENU00241

〈해외 문헌〉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61.
- Claudio, Bolzman. Rosita, Fibbi. Marie, Vial. “Les immigrés face à la retraite : rester ou retourner?”. *Revue suisse d' économie politique et de statistique*. n°3 (1993), pp.372-384.
- Chauveau, Vincent. La protection sociale des personnes âgées migrantes maghrébines, in: *Vieillir et mourir en exil: immigration maghrébine et vieillissement*. Lyon. Presses Universitaires de Lyon, 1993.
- David L. Sam, John W. Berry (2006). Acculturation: When Individuals and Group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ee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ume: 5 issue: 4, page(s): 472-48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Niall O'Higgins. 2001.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A global perspective, ILO.
- Heinz Werner (1999). *Countries With Successful Employment Policy* :

What Is Behind Their Success?, Labour Market Research Topics. No.33,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Ianthe Maclagan (1997). Out of Credit: Report on the Impact of Youth, Youthaid, London.
- INSEE, Flux migratoires par catégorie de population Données annuelles de 2006 à 2018.
 - , L'essentiel sur... les immigrés et les étrangers.
 - , recensements de la population et estimations de population.
 - , Enquête Emploi 2019.
 - , Enquêtes Emploi 1990-2010 (Enquête Emploi annuelle jusqu'à 2002, Enquête Emploi en continu à partir de 2003); traitement: CAS.
- Olivier, Monso. François Gleizes. "Langue, diplômes: des enjeux pour l'accès des immigrés au marché du travail". Insee Première. N° 1262 (Novembre 2009).
- Rosanvalon, Pierre. La nouvelle question sociale: repenser l'État-providence. Seuil. Paris, 1995.
- Sue, D. W. et al.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inegalites.fr/>
- <http://www.insee.fr/fr/>
- Azubi & Azubine GmbH (2018).
- http://www.azubi-azubine.de/ausbildung/berufsvorbereitende-massnahmen_bvb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 (2015). 「Konzept für einen bundesweiten Jugendintegrationskurs」. 04.2015.
- 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Bundesamt für Justiz (2020).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 Flüchtling: Bundesvertriebenengesetz(BVFG)”.
<https://www.gesetze-im-internet.de/bvfg/BJNR002010953.html>
- 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Bundesamt für Justiz (2020).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Aufenthaltsgesetz(AufenthG)”.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
- 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Bundesamt für Justiz (2020).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Integrationskursen für Ausländer und Spätaussiedler: Integrationsverordnung(IntV)”.
<https://www.gesetze-im-internet.de/intv/>
-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2019). 「Deutschland kann Integration-Potenziale fördern, Integration fordern, Zusammenhalt stärken」, 12. Bericht, 12.2019.
- Die Bundesregierung /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2007). 「Der Nationale Integrationsplan: Neue Wege-Neue Chancen」, 07.2007.
- Deutsches Jugendinstitut (2020). 「DJI-Kinder- und Jugendmigrationsreport 2020 - Datenanalyse zur Situation junger Menschen in Deutschland」
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2011). 「Bildung, Beruf, Integration - Jugendliche Migranten in Deutschland」.
- Kühnlein, G. & Klein, B. (2006). 「Einstiegsqualifizierung für Jugendliche (EQJ)」, Hans-Böckler-Stiftung.
-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2019). 「Migration und Integration - Integrationsindikatoren 2005-2017」.
-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2020). Bevölkerung in Privathaushalten nach Migrationshintergrund und Altersgruppen 2019.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grationshintergrund-alter.html>

-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2020). Bevölkerung in Privathaushalten nach Migrationshintergrund und Bundesländern 2019.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grationshintergrund-laender.html>
-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2020). Pressemitteilung Nr. 279 vom 28. Juli 2020.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07/PD20_279_12511.html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윤기석 사단법인 균형발전연구소장

공동연구 · 손동기 호남대학교 조교수

공동연구 · 송영신 사회정책연구소 함께살기 공동소장

전략연구 2020-24 · 충청남도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역량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 직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글쓴이 · 윤기석 외

발행자 · 윤 황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0년 12월 31일 / 발행 · 2020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31(사회통합연구실), 041-840-1114(대표)/팩스 · 041-840-1199(대표)

ISBN · 978-89-6124-540-1-03350

<http://www.cni.re.kr>

© 2020.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쇄물은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제작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사회적 가치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업들을 응원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